

2011. 12. 14(수)

제204회 달성군의회(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달 성 군 의 회

전 문 위 원 석 동 용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 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총 계		362,000	364,000	△2,000
일반회계	계	346,200	344,500	1,700
일반회계		346,200	344,500	1,700
특별회계	계	15,800	19,500	△3,700
의료급여기금		500	460	40
농공지구관리		628	628	0
치수사업		7,863	11,603	△3,74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6,716	6,716	0
기반시설		93	93	0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62,000	364,000	△2,000	△ 0.55
일 반 회 계	계	346,200	344,500	1,700	0.49
	지방세수입	77,856	77,856	0	0
	세외수입	42,955	45,407	△2,452	△5.40
	경상적세외수입	8,597	8,565	32	0.37
	임시적세외수입	34,358	36,842	△2,484	△6.74
	지방교부세	97,469	97,063	406	0.42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7,214	15,774	1,440	9.13
	보조금	110,706	108,400	2,306	2.13
	국고보조금등	74,696	74,697	△1	0
	시·도비보조금등	36,010	33,703	2,307	6.84
특 별 회 계	계	15,800	19,500	△3,700	△18.97
	세외수입	15,408	19,145	△3,737	△19.52
	경상적세외수입	2,086	5,821	△3,735	△64.17
	임시적세외수입	13,322	13,324	△2	△0.01
	보조금	392	355	37	10.43
	국고보조금등	314	284	30	10.56
	시·도비보조금등	78	71	7	9.86

○ 총액인건비 43,142백만원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총 계	362,000	364,000	△2,000	△0.55
일반 회 계	계	346,200	344,500	1,700	0.49
	일반공공행정	14,640	14,410	230	1.60
	공공질서및안전	11,771	12,261	△490	△0.40
	교육	4,592	4,817	△225	△4.67
	문화및관광	20,983	21,568	△585	△2.71
	환경보호	6,770	6,582	188	2.87
	사회복지	92,961	91,701	1,260	1.37
	보건	7,113	7,119	△6	△0.20
	농림해양수산	36,432	36,503	△71	△0.20
	산업·중소기업	1,668	1,663	5	0.32
	수송및교통	52,641	52,557	84	0.16
	국토및지역개발	37,398	36,009	1,389	3.86
	예비비	5,661	7,187	△1,526	△21.24
	기타	53,570	52,123	1,447	2.78
특별 회 계	계	15,800	19,500	△3,700	△18.97
	환경보호	6,716	6,716	0	0
	사회복지	392	355	37	10.43
	국토및지역개발	8,293	12,033	△3,740	△31.08
	기타	399	396	3	0.76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362,000	364,000	△2,000	△0.55
일 반 회 계	계	346,200	344,500	1,700	0.49
	인건비	44,135	44,045	90	0.21
	물건비	22,038	21,881	157	0.72
	경상이전	129,048	127,767	1,281	1.00
	자본지출	138,974	138,704	270	0.19
	시설비및부대비	118,094	119,533	△1,439	△ 1.20
	민간자본이전	15,050	15,062	△12	△ 0.08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16	561	1,655	256.61
	자산취득비	3,614	3,548	66	△ 1.87
	융자및출자	20	20	0	0
	보전재원	1,797	1,797	0	0
	내부거래	1,394	1,399	△5	△0.35
	예비비및기타	8,794	8,887	△93	△1.05
	예비비	5,661	7,187	△1,526	△21.24
	반환금기타	3,133	1,700	1,433	84.33
특 별 회 계	계	15,800	19,500	△3,700	△18.97
	인건비	327	327	0	0.00
	물건비	403	1,137	△734	△64.55
	경상이전	3,379	3,374	5	0.15
	자본지출	607	723	△116	△16.04
	시설비및부대비	467	723	△256	△35.40
	민간자본이전	140	0	140	100.00
	보전재원	0	0	0	0.00
	내부거래	3,716	3,716	0	0
	예비비및기타	7,368	10,223	△2,855	△27.93
	예비비	7,250	10,108	△2,855	△28.57
	반환금기타	118	115	3	2.61

5. 2011년도 이월사업

○ 명시이월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136	74,680	43,703	
일반회계	136	74,680	43,703	
정책사업단	1	320	292	- 분묘개장 지연에 따른 설계지연
회계과	2	204	185	- 협의지연 및 리모델링사업 연계 집기구입지연
토지정보과	1	703	685	- 구 군청사 매각추진에 따른 공사지연
주민지원과	1	320	319	- 토지매입 협의지연
사회복지과	4	2,917	2,372	- 사업기간미도래, 국시비교부지연
경제지원과	1	1,450	1,423	- 시장 가설건축물 철거 협의지연
문화체육과	6	4,999	4,863	- 관련부처 협의지연 - 공사기간 미도래 등
건 설 과	94	32,039	22,307	- 보상 협의지연 및 기간미도래
도시시설과	6	3,917	1,069	- 공사기간 미도래 등
치수방재과	11	14,495	6,727	- 기간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건 축 과	2	873	873	- 기본구상용역 미완료로 지연
교 통 과	1	10,525	1,200	- 유가보조금 목적사용을 위한 이월
공원녹지과	2	521	370	- 공사중지 및 공사시기 조정
보 건 과	1	918	539	- 공사기간 미도래
농업정책과	1	372	372	- 사업예정지 미확보
농촌지도과	1	50	50	- LH공사 사업지연으로 공사지연
시설관리사업소	1	57	57	- 사업시기 부적절로 월동후 추진
○ 기금(재난관리기금)				
치수방재과	1	400	381	- 공사기간 미도래

6.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40억원 보다 20억원(감 0.55%)이 감소된 3,620억원으로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45억원 보다 17억원이 증액된 3,462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5억원 보다 37억원이 감소된 158억원 입니다.
- 일반회계 중 예비비는 56억 6,083만 9천원입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3,651만원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 수입이 13억 5천만원
잡수입이 12억 2,860만원이 감소하여
총 24억 5,222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억 3,6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6,900만원 등 총 4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정보전금은

낙동강 문화관 진입도로 확장에 14억 4,000여만원 증액된
172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에 있어서는

시비보조금은 23억 671만여원이 증액되어
총 보조금은 1,107억 599만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여원이 증액된
3,4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자체사업으로는

농협에서 지정기탁받은 달성장학회 출연금 3억원,
구 군청 유료주차장 조성비 2억원
낙동강 레저스포츠벨리 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
실업정구부 우수선수 입단 전 보상금 7천만원
화원 - 옥포 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8,400만원
하수시설 편입토지 보상금 1억원
기능성강화 토마토와인식초 생산시설지원 4,900만원
FTA대비 축산업 육성 지원비 3천 5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교 다목적 강당건립비 지원사업 5억원
소도읍 육성(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 10억 6,531만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1,100만원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금 1억 1,000만원
낙동강(금호강)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15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비는

낙동강 문화관 진입로확장 사업비 1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주요 보조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7억 9,063만 9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2억 8,738만 8천원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8억 2,559만 3천원
재난지원금(이주대책 및 재해보상금) 3억 1,700만원
낙동강문화관 진입도로 건설 20억 4,000만원
달성 누리길 조성사업 6억 1,250만원
양육지원비(둘째, 셋째자녀) 1억 5,444만 3천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보상금 1억 3,246만 7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1억 2,921만 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1억 8,237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1억 6,939만 8천원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 9억원
달성1차 지방산업단지 우수박스 구조물정비 2억원
현풍 성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 7,800만원
화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10억 5,621만원
출산축하금 1억 6,600만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의 경우,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영분 등
14억 3,62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국·시·비 보조금 3,7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3,700만원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및 과오납금 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예비비를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옥포농공단지 TMS설치지원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골재판매수입 등 매각사업수입 37억 9천 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이 감액되고, 예금이자수입 5,799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37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타 하천정비 예비비 27억 1,780만 9천원과 골재채취장운영 운영비 6억 6,400만원, 하산 적치장 환경저감시설 재료비 3,000만원, 골재채취장 사후 환경 영향성 조사 연구비 4,000만원, 생태계보전 협력금 3,200만원, 하천골재채취장 철거 및 이설 2억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분과 4대강사업으로 골재판매수입과 준설토 현장매각수입 등의 세입감소로 인한 불요 불급한 사업예산 일부와 세출 전 분야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정리 추경예산으로서

- 세입부문에는 지방세분에 가용한 추정세입을 최대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의 감소분과 늘어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자수입 추가분 등을
금번 추정재원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총액 기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0억원이 줄어든 3,62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부 경상사업 중 필수경비의 증가분을 제외
하고는 전 분야에서 감소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흐름은 추경을 거치면서 통상적으로
증액되는 것이 상례인데 금번 우리 군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총액기준 감액 편성되는 것에 대하여는

세입결손의 주요원인이 된 4대강사업 종료로 준설토 매각수입, 준설토 적치장 수입이 37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추가 증액편성된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총액기준 20억원이 감소되어, 자치재정의 안정성과 세입판단의 적정성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미흡한 일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시장경제에서는 경기변동을 예측하여 재정판단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한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타당성 판단을 위해 목별, 부기별 사업내역은 예산서(안)에 의거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4.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서 점 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1월 16일

2. 제 출 자 : 하용하 의원(대표발의)

3.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과 관련하여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를 누리는 어르신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를 통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장수노인의 정의(안 제2조)

-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다. 지급액(안 제4조)

- 장수축하금은 1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경로상품으로 한다.

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안 제7조)

- 장수축하금은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현금 지급시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5.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제정안의 취지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장수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함.

2. 제정안 타당성 검토

-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 대하여 장수축하금 또는 100만원 상당의 경로상품(수의 등)을 지급하는 것은 후세에게 경로효친사상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관내 100세 이상 자 (예상인원)

2012년 : 5명, 2013년 : 7명, 2014년 15명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1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경로상품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원칙)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이 조례에 규정한 장수축하금은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장수축하금은 현금지급시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였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축하금을 받은 경우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축하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의 지급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 첫 해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은 만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가족상황	대상자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직 업
신청내용	상품명(상품신청시)		현 금 신청시	예금주	은행명
<p>「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달성군수 귀하</p>					

[illegible]

붙임 2)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 복지가 증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1월 16일

2. 제 출 자 : 하용하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1)

-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선서 또는 증언 거부 : 100만원 이하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등의 행위를 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정황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개정 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출석요구불응, 서류미제출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정황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각의 다른 위반행위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례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 별	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 거부	100만원 이하

※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1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개정이유

-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던 창안등급을 상부기관과의 통일성을 고려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조정.

4. 주요내용

- 가.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도 군민제안 대상으로 인정(안 제6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라도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 나. 창안등급을 4단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로 조정(안 제11조)

5. 관계법령

- 「국민제안규정」 제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군민제안 제도 중 창안등급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여 상부기관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안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 실정에 맞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군민제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제안이 늘어날 것이며, 군민들의 군정 참여는 물론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견”을 “의견이나 고안”으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대구
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의 개선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
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채택 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유제안”을 “아이디어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모 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제5조제1항 중 “개선 또는”을 “개선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안은”을 “아이디어 제안은”으로, “공모”를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제안”을 “공모 제안”으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

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7조제1항 중 “군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운영”을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은 현행제도 및 운영”으로,

“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의 방법으로”를 “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을 통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동으로 군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 ④ 군수는 제출된 군민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군민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제외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안등급의 조정 및 결정

제8조제5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제안주무부서”를 “제안담당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안주무부서에서”를 “제안담당부서에서”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을 “사항을 별표 1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능률성 또는 경제성
2. 적용범위
3. 실시 가능성
4. 창의성
5. 계속성
6. 노력의 정도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준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 접수한 날(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제안으로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장려상 및 노력상”을 “장려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범위 안에서 별표 1”을 “예산범위에서 별표 2”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창안 실시로 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업무 개선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시 평가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안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창안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시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보고하여”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안의 관리기관)”을 “(제안의 관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제안 관리기록부 등) 제안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동안 채택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2,3 및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정제안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합 계	-	100점
경제성 [30%]	유형 및 무형효과 유무	1 ~ 30
적용범위 [20%]	지역 전체 파급효과 가능 여부	1 ~ 20
실시가능성 [20%]	시행가능 여부	1 ~ 20
창의성 [15%]	독창성 유무	1 ~ 15
계속성 [10%]	지속적인 시행가능 여부	1 ~ 10
노력도 [5%]	고심과 노력의 유무	1 ~ 5

※ 경제성 : 유형효과와 무형효과를 합쳐 3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2】

제출보상금 지급기준

등 급	평 가 기 준	보상금 범위
A등급 창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의 각 분야에서 시행되지 않았거나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제안 • 창안 중 창의성이 50% 초과하는 제안 • 제안의 작성·제출에 5시간 이상의 시간적·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제안 	정부고시 최저임금 5시간급 상당 보상
B등급 개선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의 각 분야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실의 개선 제안 • 창안 중 창의성이 50%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안 • 제안의 작성·제출에 4시간 정도의 시간적·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제안 	정부고시 최저임금 4시간급 상당 보상
C등급 단순건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의 각 분야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실의 개선이나 변경하는 제안 중 그 효과가 적은 제안 • 제안의 작성·제출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적·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제안 	정부고시 최저임금 2시간급 상당 보상
기 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또는 분할 제안 • 공상적이고 일상적인 사항 • 그 밖에 제안 제외 사항인 경우 	보상하지 아니함

【별표 3】

실시보상금 지급기준

등 급	보상금 범위
1등급	6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등급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3등급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등급	
5등급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등급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					
수 신 : 달성군수					
제안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주 소				
제 안 제 목					
현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개 선 전		개 선 후		
<p>「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제안자 (인) </p>					

【별지 제2호 서식】

제안 실시 계획서	
제안제목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3호 서식】

제 안 실 시 평 가 서						
수 신 :						
제안제목 :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 안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기여도(%)	
실시자						
보상		표창구분		부상금		
제안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효 과	구분	·예산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행정개선()		
			금 액 또는 개선실적			
<p>「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p> <p>※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p>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4호 서식】

(제1쪽)

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제안제목 :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기여도(%)
실시자					
제안 심사 결과	창 안 등 급			부 상 금	
	표 창 구 분			추천의견	
<p>「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p>					
<p>(붙임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p>※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p>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여도(%)		비고		
실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기여도(%)		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부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상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 참여행정을 촉진하고 군민 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의견이나 고안----- ----- ----- -----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① (생략)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뜻은 -----.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생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3. 채택 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 :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	제3조(제안의 종류) ----- -----. 1. 아이디어 제안 ----- -----.

<p>2. 지정제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안의 범위와 절차를 군 공보 등에 게재하는 제안</p> <p>제5조(제안의 대상 및 모집) ① 제안의 대상은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p> <p>②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p> <p>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현재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p> <p>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제안제도에 의하여 채택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p> <p>3.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p>	<p>2. 공모 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p> <p>제5조(제안의 대상 및 모집) ① -----개선이나 ----- ----- ----- ----- -----</p> <p>② 아이디어 제안은 ----- 모집 -----, ----- -----공모 제안 ----- -----</p> <p>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p> <p>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p> <p>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p> <p>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p>
--	--

<p>4. <u>단순한 건의·진정·비난 또는 불만의 표시로 볼 수 있는 사항</u></p> <p>5. (생략)</p> <p>제7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u>군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제출한다.</u></p> <p>② <u>접수된 제안 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u></p> <p><신설></p> <p><신설></p> <p>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4. <u>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u></p> <p>5. (현행과 같음)</p> <p>제7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u>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은 현행제도 및 운영-----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을 통하여-----.</u></p> <p>② <u>공동으로 군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u></p> <p>③ <u>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u></p> <p>④ <u>군수는 제출된 군민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군민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제외한다.</u></p> <p>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	---

<p>1. (생략)</p> <p>2. 제안등급의 결정</p> <p>3. ~ 5. (생략)</p> <p>④ (생략)</p> <p>⑤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실비를 보상한다.</p> <p>제9조(심사기준 등) ① 접수된 제안서는 <u>제안주무부서</u>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p> <p>② 위원회에서는 <u>제안주무부서</u>에서 상정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p> <p>1. 창의성</p> <p>2. 능률성 또는 경제성</p> <p>3. 계속성</p> <p>4. 적용범위</p> <p>5. 노력도</p> <p>6. 실용성 및 군민편익 증진도</p> <p>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p>	<p>1. (현행과 같음)</p> <p>2. 제안등급의 조정 및 결정</p> <p>3. ~ 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범위 ----- -----.</p> <p>제9조(심사기준 등) ① 접수된 제안서는 <u>제안담당부서</u>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p> <p>② -----제안담당부서에서 -----</p> <p>- 사항을 별표 1의 -----.</p> <p>1. 능률성 또는 경제성</p> <p>2. 적용범위</p> <p>3. 실시 가능성</p> <p>4. 창의성</p> <p>5. 계속성</p> <p>6. 노력의 정도</p> <p>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준</p>
--	--

<p>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군수는 <u>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 또는 제안모집을 완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② 제8조제5항에 따라 조사, 실험, 분석,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의뢰한 경우의 소요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u>산입하지 아니한다.</u></p> <p>③ (생략)</p> <p>제11조(채택제안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u>장려상 및 노력상</u>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2조(제출보상) ① 군수는 제안을 제출하는 자에게 <u>예산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제안 제출보상금</u>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군수는 <u>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 접수한 날 (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제안으로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② ----- ----- ----- ----- <u>제외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채택제안 등급) ① ----- ----- <u>장려상</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제출보상) ① ----- ----- <u>예산범위에서 별표 2</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제13조(실시보상) ① 군수는 창안 실시로 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업무 개선에 있는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안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창안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채택제안의 활용 및 추천) ①

· ② (생략)

③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실시보상)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창안 실시로 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업무 개선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시 평가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안자에게 예산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창안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시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활용 및 추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보고하고 -----
-----.

붙임 2)

관계 법령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2957호)]

제4조(국민제안의 제출) ①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1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
3. 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연가 및 특별휴가를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복무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하여 간결하게 선서문 개정
(안 제2조제2항 별표 1)
- 나. 친족의 경조사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9조제6항)
- 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2일 가산 (안 제18조의2, 별표 4)
- 라.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연가에서 공제(안 제20조제1항)
- 마. 공가 사유 추가(안 제22조제5호, 제9호, 제10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바.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산·사산 시 특별휴가 부여
(안 제23조제11항, 제12항)

사.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별표 3)

구 분	대 상	일 수	
		현행	개정
결 혼	본인	7	5
	자녀	(신설)	1
출 산	배우자	3	5
입 양	본인	(신설)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신설)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아. 기타사항 정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1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혈액관리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중 연가, 특별휴가 등을 변경·신설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지원하기 위함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공무원의 선서문을 간결하게 하여 실효성을 살렸으며,
친족 경조사일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사산·유산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입양·탈상 휴가를 신설하는
등 복무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여
일의 능률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며
또한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지원은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중 규칙(총리령)”을 “공무원중 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 중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한다.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또는 사산 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p>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p>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
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u>공무원증 규칙(총리령)</u> 을 따른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u> ----- -----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근무시간) ①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u>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u>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p>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날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삭 제></p>
<p><신 설></p>	<p><삭 제></p> <p>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p>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신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 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 8. (생략)

<신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 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8. (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p><u><신 설></u></p>	<p>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⑩ (생략)</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⑪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p><u><신 설></u></p>	<p>⑫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p>

<p><u>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삭 제></u></p>
<p><u>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 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 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u></p> <p><u>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u></p> <p><u>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u></p> <p><u>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u></p> <p><u>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u></p>	<p><u><삭 제></u></p>

<p>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삭 제></p>
<p>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하기 위한 것 <p>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 	<p><삭 제></p>

<p> <u>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u> <u>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u> <u>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u> <u>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u> <u>용되는 기·완장, 복식 등을 제작</u> <u>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u> <u>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u> <u>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u> <u>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u> <u>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u> </p>	
--	--

<별표 1 선서문>

현행	개정안
<p>선 서</p> <p><u>본인은 공직자로서의 공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u></p> <p><u>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u></p> <p><u>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u></p> <p><u>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u></p> <p><u>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u></p> <p><u>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u></p>	<p>선 서</p> <p><u>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u></p>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결혼	본인	5
	<신설>			자녀	1
출산	배우자	3	출산	배우자	5
<신설>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신설>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붙임 3)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임회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건강검진) ①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①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1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지원과)
3. 폐지이유

○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고,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에서 저소득주민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에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가점 부여를 통해 우선 선발하고 있어,
- 나.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으로 이관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관리를 일원화하여 달성군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폐지조례안의 취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고 달성장학재단에서도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지급을 우선 지급하고 있어 기금을 달성장학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임.

2. 폐지조례안 타당성 검토

-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달성장학재단에 우선선발권이 주어져 수혜가 많은 실정이며,
- 장학금 중복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성장학재단으로 기금을 이관하여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일원화하는 것이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바 본 조례안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2011년도까지만 장학금지급,
2012년부터는 달성장학재단으로 이관
(장학기금 잉여금 : 2억6천여만원)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2011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잉여금은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에 출연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1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지원과)

3.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하여 2010년말 기금 목표액이 조성 완료된 바, 자활기금 집행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빈곤 탈출과 자립성공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사업의 범위 확대 (안 제3조)
-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지원금 사후관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17조)

5.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달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2년 시작하여 2010년말 목표액 5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 지원에 필요한 기금사용의 범위를 정하여 기금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44조에 따라 기금이 2010년말에 조성 완료되었고,
- 2006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4조 폐지 및 제183조3의 신설(자활기금의적립)로 사업의 범위(전세점포임대, 신용보증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등)가 확대되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사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로 제3조의 사업 또는 자금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또는 자금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5조의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가 사업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서 1회 연장에 한한다.

④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지체없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장 소재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⑥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그 밖에 기금의 용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군수는 제3조제6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 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 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자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4항에 따라 대여자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7조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상 은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부터 1억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차 하여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에 한한다.

③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이나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④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3%로 하 되 연체시 연15%로 한다.

⑤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사후관리) ①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 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제16조부터 제17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제1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과장, 담당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2.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기금운용·관리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군수는 기금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자활기금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보장기금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붙임 2)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1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
3. 개정이유

가. 센터의 근거규정이 불확실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개별 규정 마련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운동 시설 운영업”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어,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별도 가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무료 셔틀버스 운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 신설
 - 7. 여성과 가족 등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나. 부가가치세 별도 가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 관련 별표 시설이용료에 비고란 신설

5.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 「부가가치세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등 5개소의 시설에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에 부가가치세 별도 가산규정을 명시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현재 달성군내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 등 5개 시설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단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달성군도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반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규정을 신설함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성과 가족 등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제11조 별표의 시설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요금 (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부가가치세 금액(10%)은 별도 가산함
	70,000	49,000	35,000	63,000	45,000	35,000	58,000	42,000	30,000	49,000	35,000	3,000	2,000	1,500		
헬스장	이용요금 (월)	50,000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제11조 별표의 시설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부가가치세액 (10%) 별도가산함
	70,000	49,000	35,000	63,000	45,000	35,000	58,000	42,000	30,000	49,000	35,000	3,000	2,000	1,500		
헬스장	이용요금	50,000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약자 등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순환버스 운영) ①복지관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복지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장애인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 또는 위탁 운영자가 정하도록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과 가족 등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신설></p> <p>7. 그 밖에 여성문화복지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5조(업무)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여성과 가족 등 센터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p> <p>8. -----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신설></p> <p>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발전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5조(업무)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문화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 료 순환버스 운영</p> <p>7. -----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 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신설></p> <p>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3조(사업 및 기능)-----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노약자 등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 의 제공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p> <p>7. ----- -----</p>

현행	개정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6조 (사용료)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 수할 수 있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6조 (사용료 및 순환버스 운영)</p> <p>①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p> <p>② 복지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장애인 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 또는 위탁 운영자가 정하도록 한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5조(업무)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청소년과 가족 등 센터 이용자의 편 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p> <p>6. -----</p>

붙임 3)

관계 법령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12조(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7.(생략)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1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

3. 제정이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 운영 지침이 1999. 7.31제정된
예규로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
사항이 없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단원 명칭 및 구성, 운영, 합창단 기능에 대하여 규정
(안 제1~제4조)

나. 단원의 선발 및 위·해촉, 임무부여(안 제5조~제7조)

다.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9조)

5.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공직선거법」 제113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제정안의 취지

- 달성군 합창단 운영지침이 1999.7.31 예규로 제정되어 합창단 운영의 근거 규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임.

2. 제정안 타당성 검토

- 예규로 되어 있는 “달성군 합창단 운영지침”을 법규인 조례로 제정하여 합창단원 명칭, 구성, 운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단원의 선발 및 위·해촉, 임무부여, 운영경비의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또한 “달성군 군립 합창단”을 설치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구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합창단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 중구, 남구, 달서구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 ①합창단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합창단장은 단원의 추천으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운영) ①합창단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군수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제4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2. 각종 공연 참가를 통해 군민화합기여 및 군의 위상 제고
3.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자로 모집한다. 단,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의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단,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 ④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6조(단원의 위·해촉) ①단원은 군수가 위·해촉한다.

- ②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 ③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한 단원의 정년은 만5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④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자격기준에 적합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자
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5. 4회 이상 연속하여 연습에 불참한 자
6.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⑤단원의 위·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임무) ①단장은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단원은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 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단원은 소정의 연습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 ④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 군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단원은 무보수로 하며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공직선거법]

-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1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법을 종전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원천적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방법을 사후관리 방식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1) 기본원칙 :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
(안 제4조)
 - 2) 책무사항 명시 : 군수, 주민, 사업자 등(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3)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실천방안 등의 조항 신설(안 제8조)

- 다.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수수료의 누진적 부과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 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명칭변경 및 준수사항 일부 변경
- 1) 사업장 명칭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
 으로 변경(안 제2조)
 - 2)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추가 및 일부변경
 -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발생억제계획 및 위탁계약비용 기재
 사항 추가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방법 변경 :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던 것을 영업신고와 동시에 하도록 함
- 마.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및 항목 변경(안 제19조)

5.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
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음식물 쓰레기 과대배출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 방법을 원천적으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군수, 주민, 사업자 등의 책무사항과 실천방안 등을 신설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누진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다량배출업소의 준수사항 중 발생억제 계획 등을
영업신고와 동시에 하도록 하는 등,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억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준칙안”을 반영하였기에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달성군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수 : 232개소

(면적 165제곱미터이상 : 음식점147개소, 집단급식소 85개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자의 사업장과 「식품위생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및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갈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갈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 ①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고,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②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부피(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부피(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 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④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 ⑤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판매소 공급액과 판매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생활 폐기물과 혼합배출을 하는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영업신고와 동시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

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 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규모	⑥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부산물 처리			
	⑫ 처리방법	⑬ 처리능력 kg/일	⑭ 설치 신고일자	⑮ 처리량 kg/일	⑯ 부산물 발생량 kg/월	⑰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에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 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⑮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⑮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명 : (단위 : kg)

[illegible]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	--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	------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2)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0.18>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36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3. 식품접객업

제37조제37조(영업허가 등) ④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